

중국과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

고 성 빈*

냉전이 종언을 고하면서 동북아시아에서는 권력질서 개편이 진행되고 있다. '미-일 신안보 지침'과 이에 중-러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설정이 뒤따랐다. 그리고 금년 6월 클린턴 미 대통령의 중국방문으로 동북아시아는 새로운 질서의 방향이 결정된 듯하다.

즉, 미국은 일본과의 확고한 안보·경제상의 협력을 지속·강화하는 속에서 중국을 국제사회에 연계시키며 동북아시아의 안정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이로써 향후에도 동북아시아에 지속적으로 미군이 주둔하고 세계의 경찰 역할을 중국과 일본에 의해 인정받은 셈이다. 또한 중국은 천안문사태 이후에 미국에 의해서 불신 받았던 국제사회에서의 대국의 역할을 인정받게 되었다. 동시에 세계적인 문제들에 대한 미국과의 협의의 파트너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게 되기에 이르렀다. 반면에 러시아는 최근에 국내경제 상태가 악화되고 정치적 리더십이 부재한 혼란의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급기야 러시아는 지불유예를 선언하며 미국 등 서방의 지원을 요청하게 되어 그 세력의 퇴조를 맛보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동북아시아의 형세는 미국-일본 동맹의 한 축과 미국과 떠오르는 중국과의 '건설적 동반자 관계'를 다른 축으로 하는 양대세력의 균형관계로 특징지어질 수 있을 것이며 거기에 상대적으로 퇴조하는 러시아 세력이 - 균형의 종속변수로서 - 앞으로 어떤 작용을 할지 주목이되는 상태이다.

1. 중국과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

1) 중국의 한반도 정책

중국은 '80년대 이래로 현대화를 추진하면서 평화적인 한반도 환경을 가장 중요시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만약 한반도에서 남북한간에 돌발적인 사건이 발생한다면 중국은 매우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되기 때문이다. 남북한은 각각 그들과 우호관계를 맺고 있는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 중국의 우려는 무엇보다도 한반도에서 분쟁의 발생으로 자국이 개입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 이로 인하여 한반도에서 미국 등 서방국가들과 충돌한다면 중국의 현대화에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되리라는 점이다.

* 제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강사, 동아시아연구소 상임연구원

그러므로 탈냉전 후 - 최소한 10년 혹은 그 이상의 기간 - 중국의 대동북아 정책기조는 한반도를 포함한 주변지역에서의 안정유지라고 하겠다. 즉, 중국의 최대목표인 “中國式 社會主義”를 이념적 기초로 한 “社會主義 現代化”를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게 제일의 목적으로서 그러기 위해서는 주변환경의 안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鄧小平 사망 이후 국내의 정치적 안정과 지도 체제의 확립이 시급한 상황에서 대외관계의 순항과 안정은 더욱 긴요한 문제라고 하겠다.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기본적 시각은 다음의 몇가지 측면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중국은 한반도가 중국의 영향력하에 있기를 강력히 희망한다. 즉, 한반도는 중국과 국경선을 접하고 있으며 한반도가 중국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독자적이거나 (고구려와 당나라간의 대립의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자국과 경쟁관계인 어느 강대국의 - 美, 日, 露 - 영향력하에 놓인다는 것은 중국의 안보에 큰 불안 요소인 것이다. 한국전쟁 때 중국은 미군의 3.8선 이북으로의 進攻을 수차례 경고하여 참전하였다. 즉, 한반도 특히 북한 지역에서 미군이 주둔한다는 것은 바로 滿洲지역의 안보와 직결되고 그것은 전중국의 안보에 위협이 온다고 믿고 있다. 한반도를 전진기지로 삼아서 일본의 만주 침략이 이루어진 것을 생각하면 이 점은 이해가 될 것이다.

둘째, 한반도에서의 영향력 확보는 역사적으로 일본에 대한 견제 수단으로써 절대 불가결한 것이며 태평양에서의 미국과 일본의 동맹을 견제할 수 있는 완충 지역 내지는 전진기지를 확보하는 것이다.

셋째, 한반도는 유교 문화권이며 문화적·심리적으로 한반도에서의 영향력 유지는 동북아시아에 있어서 중국의 지도적 위치를 확인시키는 대상국이다.

넷째로, 미국과 일본의 한반도에서의 움직임이다. 중국은 북한 및 한반도에 대해서 美-日의 움직임에 견주어 정책을 펴고 있다. 즉, 미국과 일본의 북한 진출이 심화되면 될수록 중국은 대북한 영향력 유지의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원조를 강화하고 양측의 관계는 더 긴밀해 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중국은 이미 북한에 대하여 제9차 5개년 계획기간(1996-2000년) 동안에 해마다 식량, 원유 및 코크스탄을 무상 혹은 우호가격의 조건으로 공급하기로 하였다. 美-日의 北韓진출을 견제하기 위한 중국과 식량·원유가 필요한 북한의 이해의 일치가 빚어낸 결과이다.

그러나 현재 북한의 식량 위기와 경제난으로 체제의 앞날이 예측불허인 상황에서 개혁 개방을 추구하는 중국이 북한과 냉전시대인 과거 수준과 같은 협력을 추구하지는 않으리라고 본다. 중국으로서는 북한이 체제 위기가 가중되어 동반자살성 무력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을 막고 미국과 일본의 경제력에 의해서 북한이 조종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정도의 대북한 지원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북한의 지나친 약화는 북한의 붕괴나 도발의 가능성을 높이며 이로 인한 한반도에서의 급변 사태는 ‘美-日新安保指針’에 따라 美-日의 어떠한 공동행동이 나올 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만일 美-日이 군사적인 적극적 조치를 취하게 된다면 중국은 한반도에서의 영향력의 포기, 불간섭 내지는 북한과 함께 美-日의 간섭에 대한 어떤 행동을 취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는 현재 중국이 현대화 추진을 최대 목표로 하고 있는 상태에서 바라지 않는 시나리오이다.

2) 러시아의 대한반도 정책

러시아는 역사적으로 동방으로의 진출을 지속적으로 시도하여 왔다. 17세기 러시아의 동진은 청제국과의 충돌을 일으켜 양국은 처음으로 국경충돌을 겪게 되었고 같은 대국으로서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게 되었다. 이후 청제국의 쇠퇴는 러시아의 극동에서의 남하 정책의 야망에 기회를 제공하였고 반식민지 상태로 전락한 청제국은 영토의 일부를 반협박과 강제력에 떠밀려 러시아에 양보하고 말았다. 거기에 러시아는 한반도에까지 세력을 진출 급기야 영-일 동맹과 러-일 전쟁을 야기하는 등 한반도에의 진출을 실현시키려 부단히 노력하여 왔던 것이다.

최근 경제난과 지도력의 부재로 국력이 약해진 러시아는 남-북한 등거리 외교를 전개하며 한반도에서의 영향력을 유지하려 하고 있으며, 어려운 가운데도 북한에 대한 원조제공으로 결코 한반도에서 자국 영향력의 퇴조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즉 북한은 러시아에 50억 달러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으며 이를 상환할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고 알려지고 있으나 91년 소련 공산당 해체 이후 악화된 양국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일련의 협의가 96년부터 시작되어 여러 가지 외교적 합의를 이뤄 냈으며 양측은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기존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였다. 또한 러시아는 북한의 人工衛星발사 진위를 놓고 미국과 상반된 입장을 보임으로써 북한에 대한 우호적인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주장에 대해 무시하는 입장을 보이는 미국과는 달리 러시아의 우주관측센터는 북한의 인공위성을 관측했다는 보도를 하여 미국을 당황시켰던 것이다.

러시아의 한반도에 대한 시각은 다음 몇 가지로 대별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정치적으로 러시아의 한반도 세력 유지는 미-일-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는 것이다. 한반도에서의 영향력 상실은 아태지역에서의 러시아 세력의 퇴조를 가져오게 되며 이는 21세기 러시아 국력의 몰락을 뜻하는 바 러시아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다. 그러므로 러시아는 북한에 대해 최소한의 원조를 행하며 미국-일본-남한을 견제하고 러시아를 제외시킨 4자 회담을 반대하고 있다.

둘째, 경제적인 이유로서 러시아는 중국, 일본, 한국과 경제교류와 무역확대를 갈망하고 있다. 중국과 한반도와 경계선을 접하고 있는 러시아는 물류비용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경제면에서의 실리가 크며 일본의 자본을 끌어들이며 시베리아 개발에도 많은 이해를 가지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이 한반도에서 영향력을 유지하여야 그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21세기 아시아·태평양 시대를 맞아 한반도를 정치·경제적 교량으로 하여 아태지역과의 관계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은 향후로도 그 영향력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 예상이 된다.

2. 한국의 대응방안

기본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에서 자국의 안정적 경제 개혁과 정치적 이해관계를 자극하는 급격한 사태 변화를 바라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북한이 갑작스레 몰락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지원을 하면서 한국과도 관계를 확대 유지하려고 할 것이다.

주의할 점은 양국이 한반도의 안정을 바라는 것은 자국 이외의 여타 강대국들과의 관계를 고려한 결과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만일 한반도가 현재의 세력 관계를 크게 변화시킬 정도로 어느 한 강대국의 영향력이 급격히 강화되거나 혹은 자국의 영향력이 갑자기 손상을 받는다면 중-러는 언제든지 적대적 경쟁을 재개하여 한반도를 긴장상태로 몰고 갈 수도 있다. 즉 양국은 한반도를 대국주의적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다. 즉, 평시에는 한국과 우호관계를 유지하지만 여타 대국들과의 관계에서 이해타산을 고려하며 얼마든지 한국의 의사와는 무관한 행위를 - 최근 중국의 북한에 대한 무상 원유제공과 러시아-북한의 접근 등 -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러 양대 강국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몇 가지로 제안을 할 수 있다.

첫째, 중국과 러시아의 대한반도 정책에 있어서 '한국의 대응전략'의 딜레마는 우리의 국력상 별로 '主導的'으로 할 수 있는 게 없고 '反應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의 물질적 원조와 후견으로 정권을 연장하고 있다. 게다가 핵개발 카드로써 미국과 일본에 대해 양보 - 수교대가와 체제의 생존 - 를 요구하고 있다. 남한은 미국에 의해 - 미군주둔 - 안보상의 지원을 받고 있으나 그 대가로 핵개발,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 등의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국방 수단을 - 중, 러, 일, 북한에 대한 - 제한 받고 있다(혹은 아직까지 경제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의 대응책은 수동적일 수밖에 없고 강대국들에 의해 한반도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주도적 외교력을 갖추고 남한 주도에 의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이루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이상적인 방법'은 4대강국이 우려를 표명할 만큼 한국의 경제력과 전쟁억지력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과 남한에의 등거리 외교로 얻는 것을 상쇄시킬 정도의 남한과의 외교관계가 증대하다면 중국과 러시아도 현상유지를 위해 더 이상 북한에 추파를 던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이제 북한보다 남한에 추파를 던져야겠다고 생각하게 되면 북한은 하지 말라고 해도 개방하거나 우리와 대화할 것이다. 최근 중국의 대한국 외교관 지위의 격하, 한-러 양국의 외교관 맞추방사건,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사건과 러시아와 일본의 반응 등에서 보듯이 우리가 만일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때 주변 강대국들이 우리에게 대한 태도를 상상해 보아야 한다. 우리가 핵무기는 현실적으로 갖추기가 힘들더라도 중-장거리 미사일 - 북경과 모스크바를 타격할 수 있는 - 을 보유하였을 때 과연 중국, 러시아, 일본이 한국을 무시하면서 한반도 문제를 처리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자.

북한이 계속 핵-미사일 개발 전략, 벼랑끝 전술 등으로 대화와 개방에 응하지 않는 까닭은 한국의 독자적 전쟁 억지력이 대단치 않거나 그것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며, 중-러 양국의 대한국 경제교류가 한국의 경제력에 비추어 남북한 등거리 외교에서 얻는 이해를 상쇄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북한 내부의 현 권력층이 개방을 선택하는 어떤 변화가 없는 한 남북한의 경제력 차이에 더하여져 군사력의 차이도 현격해 졌을 때 북한은 개혁과 개방을 선택하고 한반도는 평화통일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생각한다.

역설적으로, 현 상태에서 북한이 핵카드를 양보하고 다행히 미-일과 수교하고 점진적 개혁을 선택한다면 한반도 통일은 더 요원해지고 분단의 장기화-고착화 우려는 더 커질 것이다. 미-일의 수교대가 제공과 개방으로 오히려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는 중국의 경우처럼 더 강력해 질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강대국들은 한반도에서의 현상유지를 추구하며 급격

한 변화를 바라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햇볕정책을 지속하며 북한으로 하여금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중용하면서 우리의 전쟁 억지력을 북한에 비해 현저히 증대할 필요가 있다. 전쟁 억지력의 증대는 당연히 경제력의 증대가 그 필수조건이다. 그러므로 한국은 첨단기술개발에 21세기의 국운을 걸어야 한다. 빠른 시일에 미국과 일본을 따라 잡지는 못하더라도 특정 분야 만이라도 세계 제일의 첨단기술을 보유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둘째로, 중국과 러시아 및 강대국들은 계속 한반도에서의 영향력의 유지, 확대에 골몰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국력도 항상 지속적인 것은 아니다. 우리의 대응력은 제한되어 있으나, 그럼에도 우리는 그들의 국력의 변화에 따라 그들을 상대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만큼만 한반도 문제에의 간섭을 허용하고 또한 그것을 축소하려고 노력하여야 한다. 중국은 정치-경제적으로 계속 강력해지고 있으나 내부의 잠재적인 문제 - 체제의 위기, 경제개발 혜택의 분배 등 - 가 많다. 그러나 중국의 영향력은 여전히 최근 미국과 함께 가장 강력한 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러시아는 점차 약화되고 있으며 그럼에도 한반도에서 과거와 같은 수준의 대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약화된 러시아와 과거사 문제로 우리와 갈등 관계에 있는 일본이 제안한 '6자회담'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한반도에서 우리의 최대의 목표는 주변 강대국의 간섭과 영향을 최소화한 가운데 남-북한 당사자들의 협의와 결정에 의해 한반도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다. 모스크바 3상회의의 결과를 회고해 보면 이 점은 명백하다. 즉, 주변 강대국들의 한반도 문제에의 영향력 증대를 우리 스스로 인정하는 '어떤 기구나 협의기구'가 생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6자회담 수용은 일본과 러시아의 간섭을 스스로 불러들이는 것이 될 것이다. 기존의 4자회담도 북한의 핵개발을 예방하고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끌어들이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하여야지 미국과 중국의 한반도 문제 협의와 결정을 하는 기구 - 모스크바 3상회의와 같은 - 가 되어서는 안 된다.

셋째로, 중국과 러시아는 오랜 세월동안 북한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당연히 외교적 인맥이 우리보다 깊고 넓을 수밖에 없다. 과거에 김일성과 등소평의 밀접한 인간관계를 그 좋은 예로 들 수 있다. 러시아도 우리와의 외교관 맞추방사건,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에 대한 미국과의 지속적인 이견을 고집하는 것을 보았을 때 북한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기간에 어떤 가시적 성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외교 전략과 전문가 육성, 지한 인맥의 확립이 중요하다. 어차피 중국과 러시아는 숙명적으로 한반도와 국경선으로 연결된 강대국들이며 현재에서나 통일 후에도 모든 측면에서 밀접한 교류가 진행될 것이기 때문이다.

넷째로, 한국은 중-러와의 관계에 있어서 개개의 사건을 중시하기보다는 한반도가 가야 할 대조류 - 한반도 평화와 통일 - 를 중시하여 거기에 따르려고 하여야 한다. 양대 강국은 북한과 등거리 외교로써 한반도 영향력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반도에서의 개개의 사건에 대한 특별한 지지를 그때그때 얻으려고 북한과 경쟁하지 말고 장기적인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입안하여 중-러 양국으로부터 결국은 북한보다는 남한이 국력증대로 한반도와 북한을 제어하고 책임질 것이라는 묵시적 인정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한국은 대중국 및 러시아 정책에 있어서 일개의 사건에 연연하지 않는 장기적인 목적지향의 정책을 펼쳐야 한다.

마지막으로 주변 강대국으로 둘러싸인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주적 태도와 능력이다. 구한말이나 한국전 때와 같이 외세가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수 없도록 우리가 스스

로 우리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와 능력을 키워야 한다. 한국은 국방력을 강화해야 한다. 가장 좋은 상대는 한국도 核武器를 보유하여 4대강국의 한반도 영향력을 상쇄하여 어느 한 강대국의 우월한 영향력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의 능력과 한반도 역학 구조상 이것은 향후 10년안에는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중-장거리 미사일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보유하는 길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우리의 안보를 어느 일국에 의존한 채 우리의 안보-통일문제를 우리가 주도하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 일인가를 자각해야 한다. 미국과의 “혈맹관계”라든지, 한-중-러 수교 이후에 증대하는 교류 등에서 역사적인 형제의 우의를 논하고 있으나 이것은 단지 초강대국인 미국과 중국, 러시아의 이익을 전제로 한 “시혜적 우정”에 불과할 뿐이다. 강대국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시혜적 우정”이 아닌 “평등한 우정”을 확보키 위해서는 한국은 첨단기술과 군사력 증대에 21세기의 사활을 걸어야 한다. 한국은 첨단과학기술 분야에서나 군사기술면에서 일정 분야만이라도 미-중-일-러에 대해서 비교 우위 내지는 결정적인 우위를 확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21세기 초반 이후에 우리의 국방력이 증대되었을 경우에는 한-미-중-일-러시아 관계가 더욱 호혜적이고 긴밀해질 수가 있다. 그러나 한국의 국방력이 강대국들의 각축전에서 자신을 지킬 수 없을 정도로 강하지 못하다면 이들의 경쟁관계의 풍향에 속수무책으로 몸을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즉, 구한말과 같은 강대국 경쟁의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